

# Business Focus

## 글로벌 규제 폭풍 속, 기업의 공급망 대응 전략

November 2024

—  
삼성KPMG 경제연구원



# Contacts

## 삼성KPMG 경제연구원

조진희

이사

E jinheecho@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I.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영향	02
II.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과 기업 사례 분석	08
III.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전략	24
IV. 결론 및 시사점	29

#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영향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코로나 팬데믹 및 기후이변, 사이버 공격은 세계 곳곳에서 원부자재 수급 불안,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물류 대란 등을 야기해 공급망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각국 정부의 자원 및 기술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

##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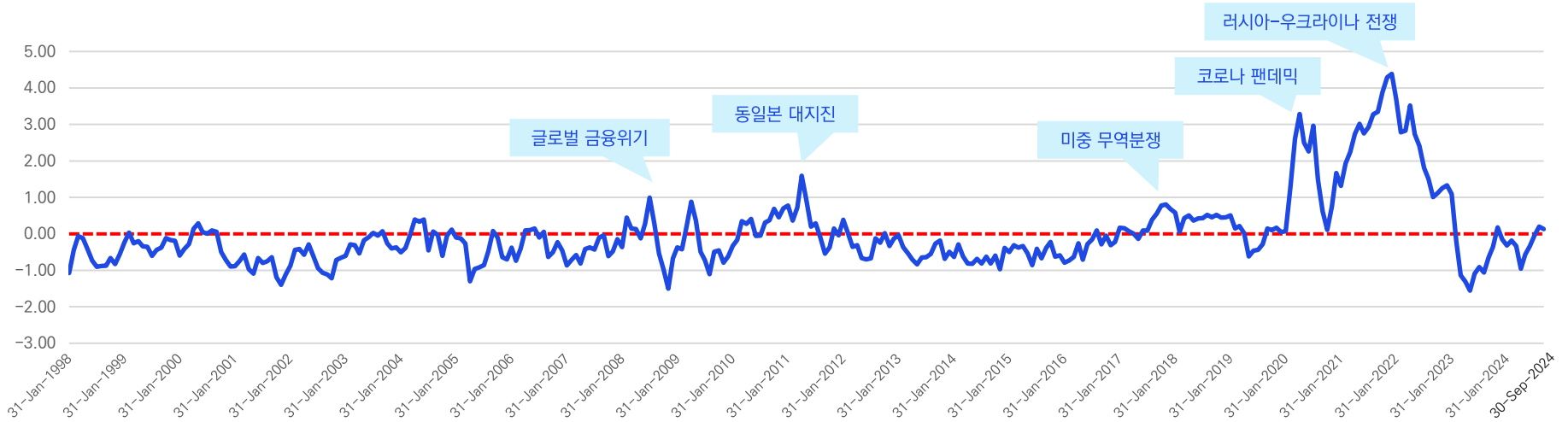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지속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나타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압력지수(GSCPI)'는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주요 해상의 물류 대란,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비 상승 등의 불확실성 증대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추이(1998-2024)



Sourc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지수 0은 과거 평균값을 의미, 0 이상이면 공급망 압력 심화, 0 미만이면 공급망 압력 완화를 나타냄

-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GSCPI)는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장애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
- GSCPI는 국제운송지수(건화물 운임지수+용선료 지수+국제 항공화물 운임지수)와 7개 경제권(중국, EU, 일본, 한국, 대만, 영국, 미국)의 구매관리자 지수(PMI)의 공급망 관련 요소(주문인도시간, 수주잔고, 구매재고) 등 27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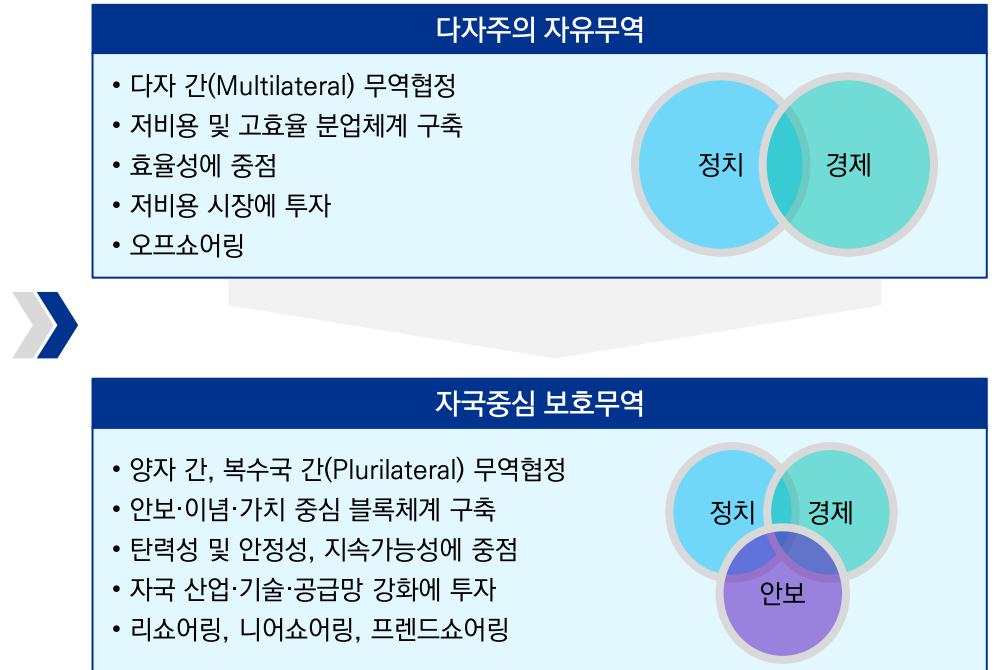
# 경제안보 시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심화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주요국들은 경제안보를 위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및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통상질서가 변화하고 있음

## 경제안보 대두 배경

미중 전략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간의 무역, 기술, 특히 반도체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 격화</li> </ul>
지정학적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공급 불안정성 확대</li> </ul>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제품의 공급 차단 및 지연 등으로 공급망 취약성 증가</li> </ul>
에너지 및 자원, 기술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석유 및 가스), 중요자원(희토류), 첨단기술 확보 경쟁 심화</li> </ul>
기후변화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로 특정지역의 농업 생산성 감소, 인프라 파괴, 이주 등 문제 발생에 따라 경제적 손실 야기</li> </ul>
기술의 발달 및 사이버 보안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경제 확산과 금융시스템, 에너지 인프라, 주요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li> </ul>

##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기업의 영향

최근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 기후이변, 자국 보호주의 무역 심화는 기업의 운영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원자재 수급, 생산 차질 및 지연, 생산비용 증가, 운송 지연, 재고관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 주요 이슈와 기업에의 영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참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으로 공급망 관련 규제 중, 기후변화 대응과 ESG 규제의 완화·축소·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강제노동 및 해외우려기관(FEOC)·바이 아메리카 관련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EU 규제가 확대·강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글로벌 공급망 규제 환경 대응 필요

##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따른 공급망 규제 관련 이슈

### 1 환경: 친환경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법·규제 연기·축소·폐기 가능성

- 파리기후협정 철회
  - 트럼프 1기 첫 해인 2017년 6월 “파리기후협정으로 미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들이 문닫고있다”며 전격 탈퇴
  - 뉴욕타임스, “취임즉시 시행할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파리협정’ 재탈퇴 포함”(24.11.10)
-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에 소극적
  - 관련 규정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것을 우려, 보류·축소·폐기 가능성
  - 블룸버그, “공화당은 트럼프가 내년 취임 후 기업의 온실가스 기후공시 요건 등 SEC의 기타 우선순위를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빠르면 11월부터 기후공시 규정 취소할 것”(24.11.5), 포브스, “기후공시는 보류되거나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다”(24.11.7)
  - 현재, SEC 권한의 적법성 시비 및 재계·공화당의 반대 이슈와 소송으로 효력 중단 상태
- 청정경쟁법(CCA): 민주당 및 공화당 동시 지지하나 축소 가능성 상존
  -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수 확보 측면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으나, 기후 관련 규제 준수 의무는 약화될 수 있음

### 2 노동 및 인권: 대중국 견제 측면에서 강화

- 강제노동규제의 경우, 중국산 제품 수입 제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전망
  - 중국 제재에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적용 범위와 제재 수위 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구르강제노동법의 경우 수입 제재에 활용될 수 있어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 더욱 확대 예상(트럼프 당선인, 위구르법 공동 발의한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무장관 지명, 2024.11.13)

### 3 바이 아메리카 및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등 강화

- 자국의 공급망 강화 및 보호, 대중국 견제 차원의 바이 아메리카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규정 지속 전망
  - Buy American, Hire American 규정으로 일자리 해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연방정부 거래 불가 원칙을 공화당 강령에서 언급하는 등 미국산 우선 조달 및 미국인 고용 확대 정책 강화 예상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Contents

I.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영향	02
II.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과 기업 사례 분석	08
III.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전략	24
IV. 결론 및 시사점	29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강화 추세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의 산업 역량 강화와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 중으로, 통상 연계한 제재, 공급망 실사·기업정보 및 제품 정보 공개 등의 다수의 규제를 도입해 기업에게 이행 준수를 요구하고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주요국의 경제안보전략과 입법 현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전략('2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 증진, 지정학적 경쟁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 공동 도전과제 대응 위한 방향성과 미국의 강점 강화를 위한 투자 및 글로벌 우선 대응과제 제시</li> </ul> </li> <li>• 미국 공급망에 관한 행정명령 14017호('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과 내용) 팬데믹, 자연재해, 지정학적 경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해결 및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강화, 이를 위해 4대 핵심 산업분야(반도체, 배터리 및 전기차, 핵심광물, 의약품) 선정해 공급망 강화 방안 모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MA), '20.2 발효</li> <li>•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JA), '21.11 발효</li> <li>•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22.6 발효</li> <li>• 반도체과학법(Chips Act), '22.8 발효</li> <li>•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2.8 발효</li> <li>•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규칙, '24.3 최종승인</li> <li>• 청정경쟁법(CCA) '22 발의, '25 도입 추진</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경제안보전략('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및 목적) 공급망·에너지 안보 위기, 중요 기간시설에 대한 물리적·사이버 안보 위기, EU 핵심기술력 열세·기술 유출, 특정국가에 대한 지나친 경제의존도에 따라 EU 단일시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EU 경제안보 강화, 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확대</li> <li>- (주요 내용) 중요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자립성 강화, 핵심 자원 및 공급망 보호, 경제 리스크 식별 및 주요 파트너 국가와 경제안보 증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신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 보호, 기후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외보조금규정(FSR), '22.12 발효</li> <li>•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23.1 시행</li> <l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3.5 발효</li> <li>• 반도체법(ECA), '23.9 발효</li> <li>• 핵심원자재법(CRMA), '24.5 발효</li> <li>• 산림벌채규정(EUDR), '24.12 시행</li> <li>• 배터리규정(Battery Regulation), '24년부터 단계적 시행</li> <li>• 기후중립산업법(NZIA), '24.2 EU의회 합의</li> <li>• 에코디자인규정(ESPR), '24.4 EU의회 통과</li> <li>• 강제노동금지규정(Forced Labor), '24.4 EU의회 통과</li> <li>• 포장재·포장재 폐기물규정(PPWR), '24.4 EU의회 통과</li> <li>•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24.7 발효, '27년 시행</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차 5개년 계획('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중국내 신수요 발굴을 통해 글로벌가치사슬 변화, 미중 갈등 격화,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li> <li>- (주요 내용) 공급망 상단의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채택, 쌍순환 전략을 통해 공급측면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수요 창출해 자립자강식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li> </ul> </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안보보장추진법('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공급망 강화 및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li> <li>- (주요 내용)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개발 민관 협력 및 지원, 특허출원 비공개</li> </ul> </li> </ul>	

Source: US Treasury Department, EU Commission,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Review, 무역협회, 언론본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미국의 주요 규제 분석

미국은 대중국 견제, 자국 산업 부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조달 참여 기회 확대,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원, 환경 및 노동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및 규제를 도입·집행 중임. 공급망 관련하여, 미국산 자재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아메리카 규정과 해외우려기관(FEOC) 투자 제한, 강제노동에 관한 실사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 필요

## 미국의 주요 규제 및 리스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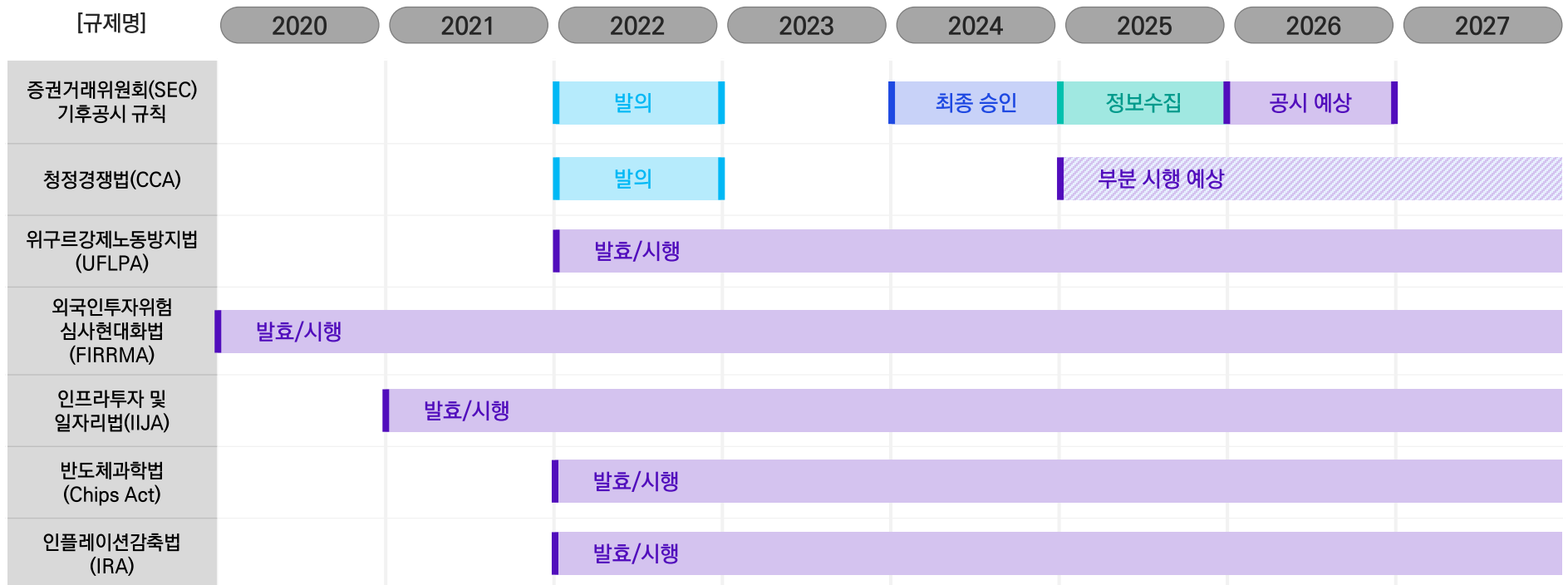
규제명	주요 내용	요구사항	미준수 리스크	의무사항	공급망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관련 재무적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공시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벌금, 제재 및 소송</li> <li>투자자 신뢰 및 추가 하락</li> </ul>	공시	☑
청정경쟁법 (C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미국 내 해당 산업 평균보다 배출량이 높은 수입품과 자국 제품에 탄소비용 부과</li> <li>(내용) 탄소 집약적인 산업군인 화석연료,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 수소, 아디프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펄프 및 종이, 에탄올 등 12개 수입품에 온실가스 톤당 55달러 관세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배출량 보고 및 생산지·생산공정 정보 제공</li> <li>관세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벌금 및 수입 제재</li> <li>평판 및 거래 리스크</li> </ul>	보고, 세금 납부	☑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UFL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채굴·생산·제조되는 상품·물품·부품 금지</li> <li>(대상) 면화, 폴리실리콘, 배터리, 타이어, 차량부품, 알루미늄·철강·구리 및 다운스트림 제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내 위구르 지역 기업의 존재 여부 확인 및 강제노동 여부 실사 및 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금지, 법적 제재 및 경제적 손실</li> <li>제품 압류·회수·폐기</li> </ul>	실사	☑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 (FIRR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중국 및 외국의 비지배적 투자 및 부동산 거래로 야기되는 국가 안보 우려에 효과적 대응 위해 외국인투자 심의·승인 기관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권한 확대·강화</li> <li>(내용) 핵심기술·핵심 인프라·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의 외국인의 지배적 투자(M&amp;A) 뿐만 아니라 비지배적 투자, 부동산 거래까지 심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등 FEOC 기술 유출 제한을 위해 모든 거래 모니터링 진행, 외투 신고 의무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승인시 거래 취소</li> <li>벌금 및 민사처벌</li> <li>FEOC 규제</li> </ul>	신고	☑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 (IIJ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노후화된 국가 기반 시설 재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촉진</li> <li>(내용) 교통, 전력, 에너지, 인터넷 등 인프라 재건에 8년간 2조 2,500억 달러 투입 및 세계 지원, 미국산 조달 특혜 및 연방 보조금 지급 등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아메리카 규정: 지원사업 미국산(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사용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 해지, 정부 지원금 환수, 공공 발주 참여 제한</li> </ul>	-	☑
반도체과학법 (Chip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특정지역에 편중된 반도체 제조시설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위험을 인식해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요체로 지정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li> <li>(내용)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에너지(원자력, 탄소중립), 바이오, 우주항공 등 기초과학 R&amp;D,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에 2,000억 달러 투입, 반도체 제조·장비구매·설비투자에 25% 세액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등 FEOC 내 생산능력 확대 5% 이내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 중단 및 계약 해지</li> <li>FEOC 규제</li> </ul>	-	☑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미국 경제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 투자 촉진 및 첨단기술 연구개발,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을 통해 전기차와 핵심광물 공급망의 대변화 촉진</li> <li>(내용) 발전, 탄소격리, 연료, 가정용 에너지 설비, 건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설 등 3,700억 달러 지원 및 세액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물·구성물질·부품 등 전체 공급망의 원산지·공급자 지역정보 추적 및 부가가치 보고</li> <li>FEOC 기업의 공급망 포함 여부에 대한 실사 체계 구축 및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 환수 및 세금 혜택 박탈</li> <li>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li> <li>FEOC 규제</li> </ul>	-	☑

Source: US Treasury Department, EU Commission,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Review, 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미국의 주요 규제별 시행 타임라인

SEC의 기후공시 규칙은 '26년 1월부터 공시가 의무화되었으나 현재 소송으로 효력 중단 상태이며, 청정경쟁법은 '25년 이후 시행이 예상됨. 위구르강제노동 방지법은 '22년 시행되어 대미 수출 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은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며 주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

## 미국의 주요 규제별 시행 타임라인



Source: US Treasury Department, EU Commission,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Review, 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미국의 주요 규제별 요구사항

미국의 경우, 상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됐으며, 공급망 관련해 위구르 강제노동에 관한 실사 의무와 중국 및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투자 제한 및 미국산 원자재 사용 의무 규정에 유의해야 함

## 미국의 주요 규제별 요구사항

[규제명]	투자 및 생산	실사	공시	공개 및 보고	벌금 및 제재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규칙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허위 정보 공시 시 민사 및 형사 처벌
청정경쟁법(CCA)				탄소배출량 보고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UFLPA)		강제노동 실사 (위구르 제품 수입 시 강제노동 미활용 증명)			강제노동 의심제품 수입 금지 및 압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IRRMA)	해외우려기관 투자 제한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미국산 자재 사용 의무				
반도체과학법(Chips Act)	해외우려기관 투자 제한			공급망 관련 정보 공개 및 반도체 생산기업 등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 투자 제한			광물·구성물질·부품 등 공급망 정보 공개	

Source: US Treasury Department, EU Commission,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Review, 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EU의 주요 규제 분석(1/2)

EU는 역내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회복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환경·산업·경제·외교·법치·민주주의를 6대 정책 목표로 설정해 총 661개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으로, 특히 다수의 환경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탄소 중립 및 순환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실사·공시·인증 등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EU의 주요 규제 및 리스크 분석

규제명	주요 내용	요구사항	미준수 리스크	의무사항	공급망
배터리규정 (Battery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 강화</li> <li>(내용)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적용, 배터리 여권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추적 및 원자재의 원산지, 재원 정보 파악 및 보고</li> <li>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2031년부터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매금지·시장철수·리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실사</li> </ul>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탄소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생산활동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제도</li> <li>(내용) EU로 수입되는 특정품목에 대해 역내 생산되었다면 지불해야 했을 탄소가격 부과</li> <li>(대상)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및 대상 품목군 내의 특정 전구체(핵심 중간재), 특정 다운스트림 제품(2026년부터 철강업종부터 전면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구성 단위별 탄소발생량 추적 및 보고</li> <li>CBAM을 통해 규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신고서 제출,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의무 수행을 통해 생산주기상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가격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징금 부과, 수입 금지 - 미인증 규모 3배 수준 벌금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인/신고</li> <li>내재배출량 산정 및 검증</li> <li>탄소배출량 보고 및 탄소세 납부</li> </ul>	
에코디자인규정 (ES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EU 시장 유통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li> <li>(내용) EU 내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상품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품 전 생애주기 관련 생산·유통·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환경조건 및 에너지 효율 등 기준 설정</li> <li>(대상 분야) 전자제품 및 ICT, 배터리 및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건축 및 건설, 식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애주기'를 담은 디지털제품여권(DPP) 정보 제시</li> <li>공급망 내 환경 데이터 추적 관리: 제품 디자인 및 설계, 내구성, 재사용, 수리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징금 부과</li> <li>제품 판매 금지, 공공조달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제품여권 (DPP) 정보 제시</li> </ul>	
산림벌채규정 (EUD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산림전용 또는 산림황폐화와 관련된 품목 또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규제</li> <li>(대상품목)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li> <li>(조건) 산림전용 없는 제품일 것, 2) 생산지국의 관련 법률 준수해 생산되었을 것, 3) 제품에 대한 실사선언서가 제출되었을 것(EUDR 제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구성 원자재 중 산림 전용지역 원산지 증명/실사선언서</li> <li>주요 의무는 ① 실사시스템 구축 및 유지, ② 실사 수행, ③ 실사선언서 제출, ④ 정보 보관, ⑤ 정보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벌금 부과</li> <li>제품 압수, 수익 몰수, 제품 출시 및 유통, 수출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사</li> <li>정보공개</li> </ul>	
기후중립산업법 (NZ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의 EU 역내 생산 확대 및 공급망 강화, 2030년까지 청정기술의 유럽 내 생산 비중 40%까지 제고</li> <li>(내용)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 기준 및 탄소중립 가속화 단지 조성, 탄소 포집·운송 및 저장, 재생에너지 배치 위한 경매,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역내 사업자 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 배출 감축 계획 수립 및 보고,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제품 설계, 공급망의 탄소 중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벌금 부과</li> <li>탄소배출권 거래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 배출 저감 목표 준수 및 청정에너지 사용</li> </ul>	
포장·포장재 폐기물규정 (PPW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포장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li> <li>(내용)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 5% 감축, 플라스틱 감축 의무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금지, 포장재 재활용 의무, 포장 폐기물 90% 수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1.1부터 일부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전면 금지, 유해물질 사용 제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벌금 부과</li> <li>제품 판매 금지, 수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활용 기준 준수 및 유해물질 사용 제한</li> </ul>	

Source: US Treasury Department, EU Commission,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Review, 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 EU의 주요 규제 분석(2/2)

EU는 역내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회복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환경·산업·경제·외교·법치·민주주의를 6대 정책 목표로 설정해 총 661개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으로, 특히 다수의 환경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탄소 중립 및 순환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실사·공시·인증 등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EU의 주요 규제 및 리스크 분석

규제명	주요 내용	요구사항	미준수 리스크	의무사항	공급망
강제노동금지규정 (Forced Lab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및 내용) EU 역내 유통상품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원자재 채굴·수확·제조·유통 등 공급망 내 강제노동 결부 제품의 역내 유통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대상 기업은 해당 상품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위험 파악·예방·완화·종료와 관련 정보 제출</li> <li>공급망 추적 및 인권 관리 현황 실사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내 판매 및 수입 금지, 회수/폐기, 벌금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재 리스크 대응 차원 실사 권장</li> </ul>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및 내용) 기업은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벌금 부과 및 투자자 신뢰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li> </ul>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EU 역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EU 차원의 기업 의무 강화</li> <li>(내용) 일정 기준 충족 기업의 전 공급망(자사, 자회사, 협력사 등) 활동에 대한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예상·제거·완화를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품공급사부터 원자재 공급사까지 완전한 공급망 파악 및 실사</li> <li>기업의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실사 실행(실사 정책 2년마다 검토하여 업데이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징금 및 민사책임, 수출 금지</li> <li>- 전년도 순매출액 5%까지 과징금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 및 환경 실사</li> <li>실사 보고서 작성 및 공시</li> </ul>	
반도체지원법 (E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반도체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EU의 경쟁력 강화</li> <li>(내용)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증감 위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공급 안정성 확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가치사슬 내 위기 상황 발생 시, 주요 기업에 필요 정보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청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li> <li>지원금 환수 및 연구 개발 지원 중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상황 발생 시, 데이터 제공 의무 및 우선 공급 의무</li> </ul>	
핵심원자재법 (CR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EU의 핵심원자재의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 촉진, 가치사슬의 단계별 역량 강화 등 공급망 안정화</li> <li>(내용) 전략원자재 대상 채굴·가공·재활용 시 EU 연간 수요량의 최소 10%·40%·15% 역내 수행,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율이 65%를 넘을 수 없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회사, 공급사 대상 실사 체계의 구축/검증 및 공시</li> <li>전략원자재 사용 기업은 공급망 테스트, 영구자석 제품 출시 기업은 재활용 정보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판하락 및 경쟁력 약화 등 간접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리스크 평가</li> <li>정보공개</li> </ul>	
역외보조금규정 (F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기업결합, 정부 조달 등의 분야에서 보조금을 통해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 규제</li> <li>(내용)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에 대한 사전신고에 대해 역외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조사,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ICT가 EU FSR 조사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 및 재정적 기여 관련, 해당 데이터 체계적 수집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벌금 및 기타 제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 신고 및 심사</li> </ul>	

Source: US Treasury Department, EU Commission,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Review, 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EU의 주요 규제별 시행 타임라인

EU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규제들은 '19~'24년 EU 집행위에서 추진되어 왔으며, 입법 단계를 거쳐 '24~'25년 이후부터 순차 시행되고 있음

## EU의 주요 규제별 시행 타임라인

[규제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배터리규정(Battery Regulation)				도입	발효/단계적 시행		배터리여권 도입	라벨링 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 발의		발효	전환기간		시행	
에코디자인규정(ESPR)			도입		의회통과/발효	제품별 순차 시행 예정		
산림벌채규정(EUDR)			도입	발효	시행			
기후중립산업법(NZIA)				초안 발의	발효/시행			
포장·포장재 폐기물규정(PPWR)			초안 발의		의회통과	발효 예정	각 국별 법제화 예상	
강제노동금지규정(Forced Labor)			초안 발의		의회통과/발효	유예기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도입		발효	시행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초안 발의			의회통과/발효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
반도체지원법(ECA)			초안 발의	발효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발의	발효	전환기간	시행	
역외보조금규정(FSR)		초안 발의	발효			시행		

Source: US Treasury Department, EU Commission,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Review, 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EU의 주요 규제별 요구사항

EU의 경우 ESG 관련해 환경·인권·원산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추적 및 실사 수행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부분별로 촘촘하게 의무가 부과되어 미준수 시, 과징금 부과·제품의 압류와 회수, 폐기·영업중지·공공조달 배제·평판하락 및 경쟁력 상실 등의 다양한 직·간접적인 리스크가 예상됨

## EU의 주요 규제별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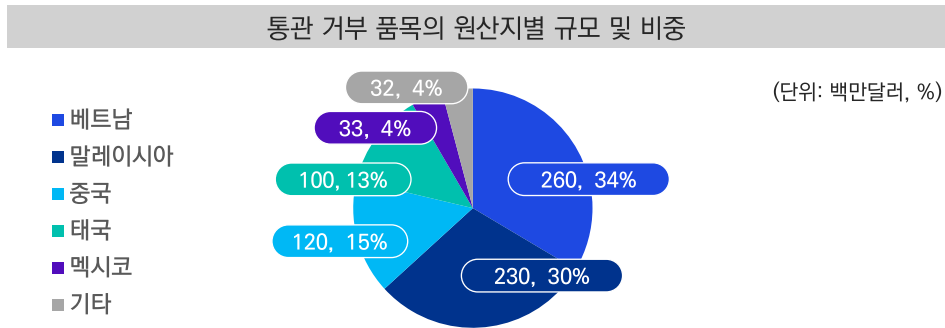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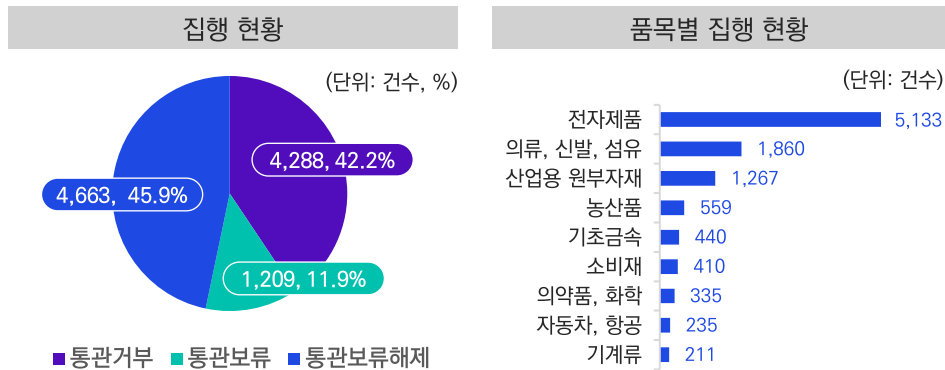
[규제명]	제품 설계 및 생산	실사	공시/공개 및 보고	등록 및 인증	벌금 및 제재
배터리규정(Battery Regulation)		공급망 실사		성능 등급 라벨 부착	시장 접근 제한, 지원 철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서 제출(수입량, 내재배출량, 기 지불 탄소가격 등)	인증서 구매 및 제출 (26년부터)	인증서 미제출 시 벌금 부과
에코디자인규정(ESPR)	지속가능성·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RoHS 지침 충족		제품 환경 정보 (Digital Product Passport)		벌금, 판매 금지, 제품 리콜
산림벌채규정(EUDR)		산림벌채 실사 (원산지 증명)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4% 과징금
기후중립산업법(NZIA)	청정 기술 설계 및 생산 촉진				벌금, 지원 철회, 허가 취소
포장·포장재 폐기물규정(PPWR)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및 과대포장 금지		포장재 사용량 및 재활용 현황		벌금, 시장 접근 제한, 추가 환경세 등
강제노동금지규정(Forced Labor)		강제노동 실사			위반 제품 시장 철회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ESG 정보		벌금 부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인권/환경 실사			위반 시 연 매출액 최소 5%이상 과징금
반도체지원법(ECA)			공급망 정보		지원 철회, 공급망 배제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 실사체계 구축	공급망 및 재활용 정보		시장 접근 제한, 프로젝트 참여 배제
역외보조금규정(FSR)			보조금 보고		진출 제재

Source: US Treasury Department, EU Commission,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Review, 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공급망 규제 동향: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집행 통계에 따르면, '22.6.21 시행 이후 '24년 9월까지 총 10,160건의 조사대상 중 42.2%가 통관 거부되었으며, 통관 거부된 품목 중 전자 및 섬유, 산업용 원부자재가 84.0%를 차지함. 미국 수출 시 원자재·중간재가 위구르 지역 및 특정단체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등 '중국 관련 공급망'에 유의해야 함

##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UFLPA 집행 현황



### 기업사례

- 폭스바겐 그룹**
  - ✓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 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통보
  - ✓ CBP에서는 1만 4천여 대의 차량을 통관 보류하여 폭스바겐 그룹은 해당 차량들에 대한 부품 교체
-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카멜 그룹(Camel Group Co., Ltd.)**
  - ✓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노동자 모집 및 수송으로 인해 UFLPA 적용 및 수입금지기업으로 선정('23.8)

### 시사점

- 제·상품의 부품, 원재료 등 생산·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 및 소명 의무 부과로 N차 공급망에 대한 관리 필요
- 위험 공급망 실사 결과 및 관련 증빙 제출 등 의무 부과로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및 히스토리에 대한 관리 필요성 대두

Source: US CBP(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Statistics), 24.11.1 기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공급망 규제 동향: EU 역외보조금 규정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은 '23년 7월 시행되어 규제 이행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인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ICT 등이 주요 조사 분야로 주로 중국 기업을 겨냥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

##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집행 현황

구분	조사 대상 기업	내용	경과 및 결과
공공 조달	중국 철도차량공사 (CR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리아 교통부의 6.1억 유로 규모의 전동열차 입찰사업에 예상 계약금액의 절반인 3.1억 유로 입찰 제시</li> <li>• 집행위는 중국 정부로부터 입찰액의 5배 해당하는 17.5억 유로 보조금 구령으로 낮은 입찰 가능했다고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위 심층조사 개시한 지 6주만에 해당 기업 입찰 자진 철회하면서 조사 종료</li> </ul>
	중국 국영기업 연관 컨소시엄 (ENEVO, Shanghai Electr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루마니아 정부의 3.75억 유로 규모의 태양광발전 조달 입찰</li> <li>• 두 컨소시엄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규모가 입찰 계약 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위 조사 개시하자, 두 컨소시엄 모두 입찰 자진 철회하면서 조사 종료</li> </ul>
기업 결합	UAE 국영 통신기업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의 국영 통신사인 e&amp;의 체코 통신기업 PPF사 지분 인수</li> <li>• 집행위는 예비검토를 통해 UAE 정부의 무제한 보증, UAE 국영은행의 인수거래 촉진하는 대출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 진행 과정, 입찰가 초과한 인수 허용 등 보조금에 따른 인수 변동사항 평가 조사 진행</li> <li>• 문제 없음으로 조사 완료 추정(e&amp;사, 24.10.25 지분인수 완료 발표)</li> </ul>
직권 조사	중국 풍력터빈 제조기업 (Envision, Mingya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5개 회원국(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풍력발전 단지 개발</li> <li>• 해당 기업은 시장가격 대비 50% 낮은 가격으로 제품 공급, 최대 3년 후불 조건 제시로 역내 시장 공정성 저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위 직권조사 개시(24.4), 조사 진행 중</li> </ul>
	중국 보안장비기업 (Nucte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위, 닥텍사의 네덜란드 및 폴란드 지사의 보조금 관련 데이터 요구(24.4.23)</li> <li>• 동사는 170개국 공항과 항구에서 사용하는 수화물 스캐너 장비 제조기업으로, '20년 미국 정부의 보안위협 블랙리스트 등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위 직권조사 개시(24.4), 조사 진행 중</li> </ul>


### 주요 조사 대상

- EU의 핵심 전략 분야: 인프라, 청정기술, 안보
  - ✓ 통신, 전동열차, 풍력터빈·태양광, 보안장비 등
  
- 5대 왜곡 보조금(FSR 제 5조)
  - ✓ 유동성 위기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
  - ✓ 부채·채무의 무제한적 보증
  - ✓ OECD 공적지원 수출신용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 금융 지원
  - ✓ 기업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 보조금
  - ✓ 공공조달에 유리한 입찰 조건 제공하는 보조금

Source: Kotra,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공급망 규제 동향: 제품 단위 관리와 통제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범위 확대 기준이 기존의 '사업장 단위 관리'에서 '공급망 전체의 제품 단위'로 관련 규제에 따른 관리 레벨이 강화되고 있어 제품 단위 - N차 공급망 등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함

사업장 단위 탄소 배출관리	정의	제품(SKU 등) 단위 LCA* 
기업이 소유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및 리스크를 관리		제품 Life-cycle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량 및 리스크를 관리, 제품의 탄소집약도(Intensity) 수준으로 관리 고도화
기업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목표, 전략 및 성과 등의 공시 권고 (e.g. GRI 등)	공시 기준	Value Chain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량 목표, 전략 및 성과, 리스크 및 시나리오 분석 공시 의무 법제화 (e.g. ISSB 등)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규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공급망 실사 지침, EU Taxonomy(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 美 공정전환경쟁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ope 1: 자동차 등의 직접 연료 사용 또는 생산공정 간 배출</li> <li>✓ Scope 2: 외부 전기 및 열(스팀)의 사용으로 인한 배출</li> </ul>	관리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ope 1, Scope 2</li> <li>✓ Scope 3: 사업장 외부의 Value Chain 전반에 걸친 배출</li> </ul>
<p>사업장 단위 관리 시, 환경 리스크·유해요소를 사업장 외부로 이전하여 대응 가능(Green Washing), 이로 인한 Sustainability 실질 대응 부족, 규제 및 이해관계자 리스크 증가</p>	 <p><b>관리 레벨 강화</b></p>	<p>기업의 실제적인 경제 활동(Value Chain) 관점의 기후변화 대응으로 실제적인 리스크 최소화 가능, 탄소 배출 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환경 영향도 평가</p>

Source: 삼정KPMG

\* 전과정 평가 : Life Cycle Assessment(LCA)

## 기업의 공급망 관련 리스크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강제노동, 산림 벌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기후변화 및 탄소 감축 등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사 및 소송, 수출금지 등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강력한 법적 요구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

### 기업의 공급망 관련 이슈

CDP, 글로벌 팜유 공급망 자금줄 조사... 중국이 5조 넘게 대출과 보증 제공 2021.07.12

중국 태양광패널 기업, 공급망 내 강제노동으로 미국 수입보류 2021.08.05

유니클로 인권이슈로 발목인 일본 정부, 3000개 기업 인권 실사 착수 2021.08.17

집단소송당한 아마존, "식품 포장재에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하겠다" 2021.01.07

미 상원, "BMW 中 강제노동 부품 차 수출했다" 강력 규탄... BMW 주가에도 영향 2024.05.24

셀 이사회 기후변화 대응 소홀로 피소 2023.02.09

소비재 업계 덮친 공급망 인권 이슈...글로벌 로펌, 법적 리스크 경고 2024.07.08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기업의 공급망 관련 분쟁 사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내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문제, 탄소 배출과 오염 문제,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해 해당 지역 정부 및 인권·환경 단체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기업의 공급망 분쟁 사례

기업	분쟁 사항	주요 내용
네슬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노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농장에서 아동 노동착취 관련 미국서 법적 제소('21.2) → 소송 기각됐으나 국제사회로부터 비난</li> <li>네슬레,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 발표('22.1)</li> </ul>
아마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라스틱 사용 및 환경 오염 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및 오염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li> <li>복잡한 공급망에서 포장재 사용에 대한 규제 준수 중요, 환경 보호 요구 증대</li> </ul>
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 배출 책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 배출 감축 소홀로 법적 제소('21) → 네덜란드 법원, 2050년까지 45%의 탄소 배출 감축 명령' 판결</li> </ul>
토탈 에너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의무 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간다 및 탄자니아에서의 유전 개발사업 관련, 강압적 토지 취득, 미흡한 보상, 원주민 생활 및 생물다양성 파괴, 기후변화 가속화 등 위험 초래로 실사 의무 위반 제소('19) → 기각('23)</li> </ul>
EDF(프랑스 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실사 의무 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멕시코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시 토착민과 적절한 협의 부족 및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서 인권 존중 의무 관련 조치 미흡으로 실사 의무 위반 소송('20) → 기각 됐으나 멕시코 에너지부의 EDF와 멕시코 국영 전력회사의 전력공급계약 취소로 풍력단지 개발 취소</li> </ul>
Casino Groupe (프랑스 대형 유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실사 의무 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라질과 콜롬비아의 공급망에서 불법 삼림 벌채, 적법하지 않은 토지 수용 도축장 소고기 구입 등 공급망 실사 위반 제소('21)</li> </ul>
Compass Minerals International (미국 광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시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브라질 자회사의 수은 배출 관련 부정확한 시험 보고서 제출에 따른 시정조치 받았으나 운영 정지, 소송 등 재무적 영향의 평가 및 공시 미흡으로 SEC에 의해 기소 → 약 1,200만 달러 벌금 명령('22)</li> </ul>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기업의 공급망 규제 대응 동향(1/2)

미국, EU 및 각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노동 및 인권 등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규정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장 중에 따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 전략의 재정비,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음

## 주요 기업의 규제 대응 동향

분야	기업	주요 조치 사항
전기 전자	애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까지 전세계 200개 이상 협력업체들에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 요구</li> <li>모든 현장에서 고충처리 매커니즘 포함한 근로자 의견수렴 채널 구축 요구</li> </ul>
	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쟁광물이 포함된 제품의 공급업체가 제3자 감사 실시, 검증되지 않은 원료 사용되는 제련소와 거래 중단 요구</li> </ul>
화학	D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cope 3 배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 위해 공급업체 대상 탄소배출량 데이터 및 감축 계획 요청</li> <li>분쟁광물 포함된 제품 공급 불가</li> </ul>
	바스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cope 3 배출에 대한 데이터 수집 위해 공급업체에 원자재에 대한 제품 탄소발자국 자료 제공 요청</li> <li>운모 조달 관련 사회적 책임 강화와 아동 노동 배제되도록 높은 기준 적용</li> </ul>
자동차	토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사용량 절감활동,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세부 데이터 요구</li> <li>불법적, 비윤리적 방식의 원자재 조달 중단 요청</li> </ul>
	폭스바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업체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RE100 요구</li> <li>배터리 원자재 핵심소재인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제조과정 공개 요구</li> <li>아동착취와 연관된 공급업체 계약 불가</li> </ul>



제품단위 별 순 주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모니터링 체계 必



환경, 노동 및 인권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 관리 및 실사 대응, 인증 要



제조, 조달에 대한 정보 투명성 확보 및 정량·정성적 대응 체계 확보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정보 Governance 要”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기업의 공급망 규제 대응 동향(2/2)

미국, EU 및 각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노동 및 인권 등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규정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장 중에 따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 전략의 재정비,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음

## 주요 기업의 규제 대응 동향

분야	기업	주요 조치 사항
소비재	네슬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사 공급망 내 ESG 관련 위험요소 공개, 지속가능 목표 및 성과 보고 체계 구축</li> <li>벌채없는 제품 공급위한 Forest Positive 전략 발표</li> <li>위성기술을 통해 원재료 생산지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li> </ul>
	H&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 및 환경 위험 최소화위한 지속가능성 실사 시스템 구축 및 강화</li> <li>협력사의 환경 및 사회적 기준 충족 여부 정기 평가, 교육 제공</li> <li>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li> </ul>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체인 기반 공급자 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Supplier CO2 Emission Monitoring System, 이하 SCEMS) 도입해, 공급업체도 탄소 배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관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테슬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투명성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해 원자재 출처 추적</li> <li>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 확보위한 장기 계약 체결</li> </ul>
	폭스바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내 인권 침해 방지위한 새로운 실사 도입</li> <li>주요 원재료의 공급망 투명 추적</li> </ul>
기술	S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사 공급망의 ESG 위험 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li> <li>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평가</li> <li>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경 및 인권 문제 모니터링</li> </ul>



규제 항목별 공급망 정보 수집, 분석, History 관리 중요



시스템 기반 공급망 관리를 통한 대항력 있는 정보관리 체계 확보



지속 가능한 실사 및 평가 시스템 구축

“IT·시스템 기반 복합규제 실사 대응 기반 확보 必”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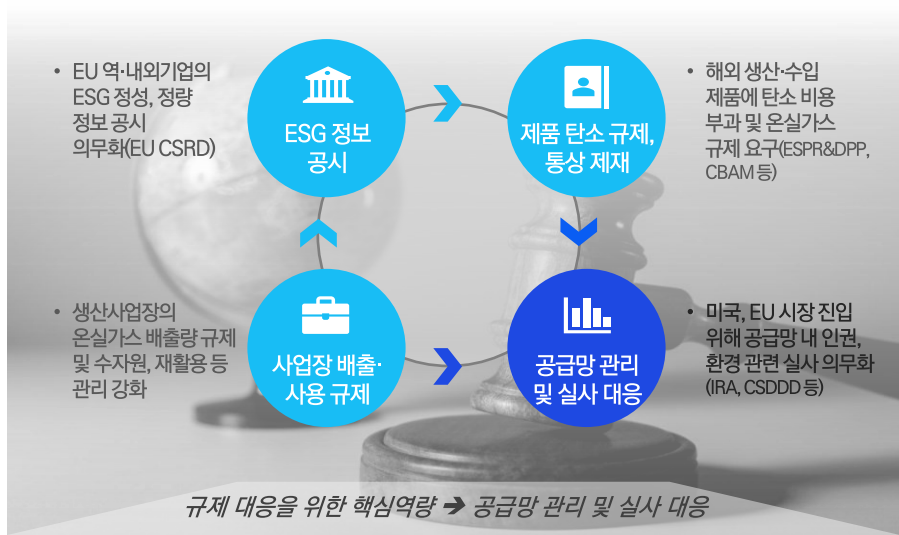
# Contents

I.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영향	02
II.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과 기업 사례 분석	08
III.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전략	24
IV.	결론 및 시사점	29

# 규제의 폭풍 속, 기업의 대응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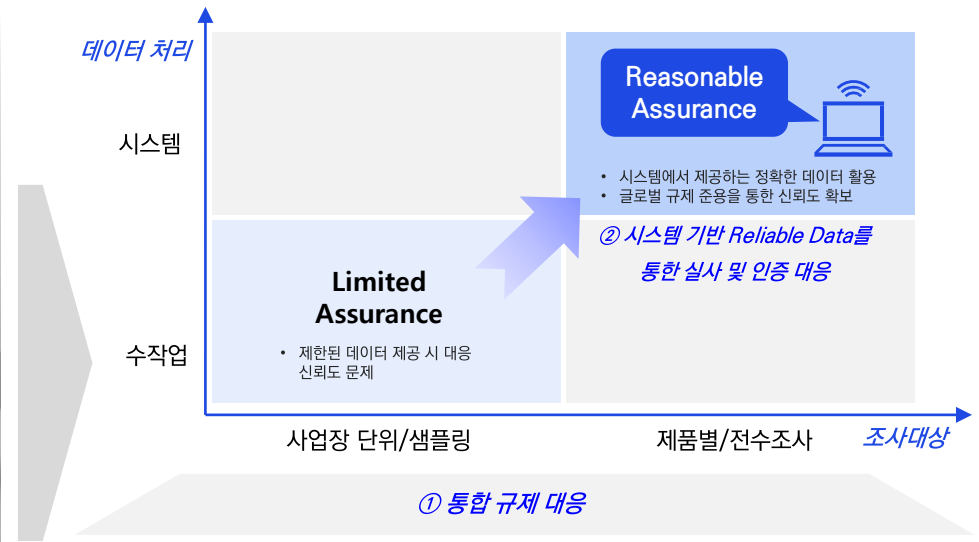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 EU의 강력한 공급망 규제 환경하에서 기업들은 통합적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와 동시에 다양한 규제 대응 플랫폼과 공급망 실사를 위한 인증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 모색 필요

## 다양한 규제들은 결국 공급망에 대한 관리 요구



미국과 EU의 주요 규제					
Battery Regulation	NZIA	CSDDD	기후공시 규칙	IJIA	
CBAM	PPWR	ECA	CCA	Chips Act	
ESRD&DPP	Forced Labor	CRMA	UFLPA	IRA	
EUDR	CSRD	FSR	FIRRMA		

## 공급망 규제 대응 추진 방향 - Two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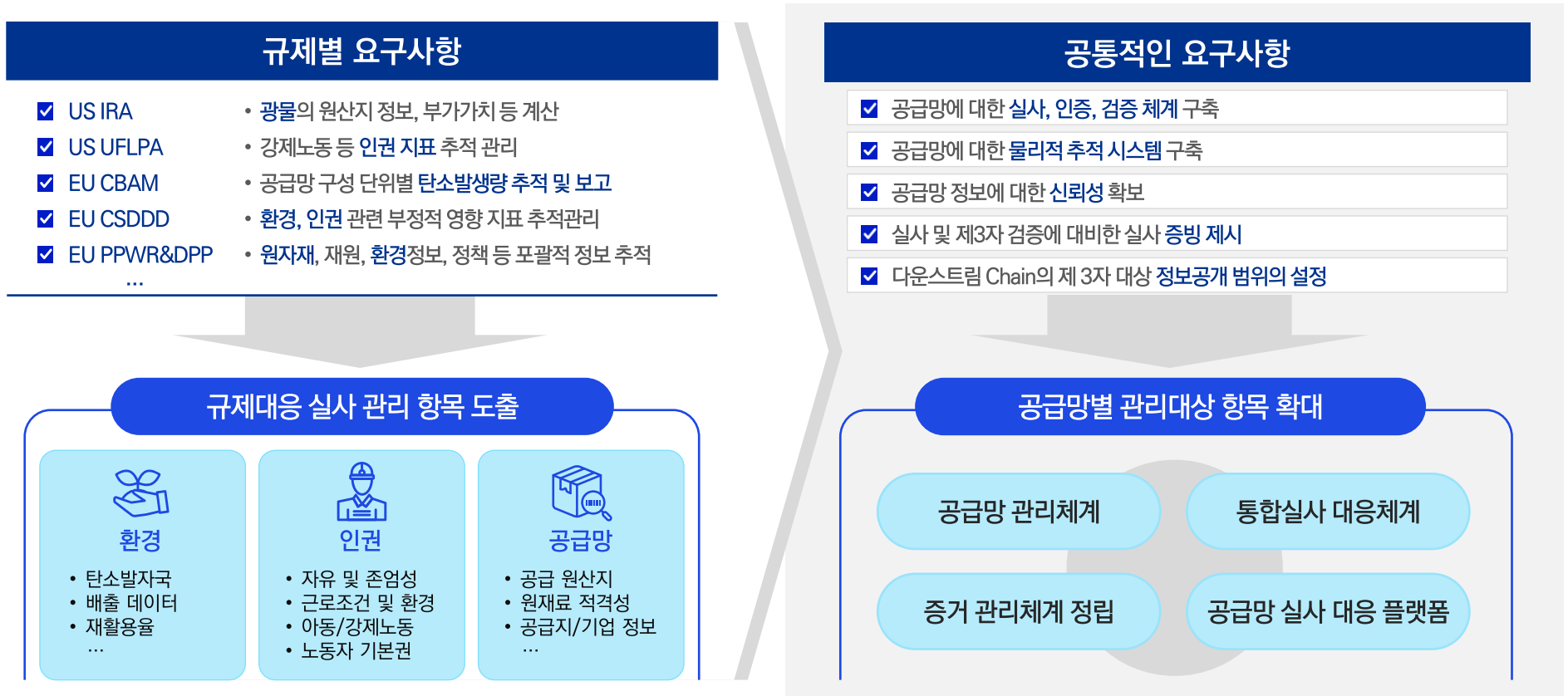


- ① 다양한 규제(Multi Regulation)에 따른 요구사항 통합 대응
- ② 효율성·신뢰성 높은 대응 필요: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규제·실사 대응

Source: 삼정KPMG

# ① 공급망 규제에 대한 통합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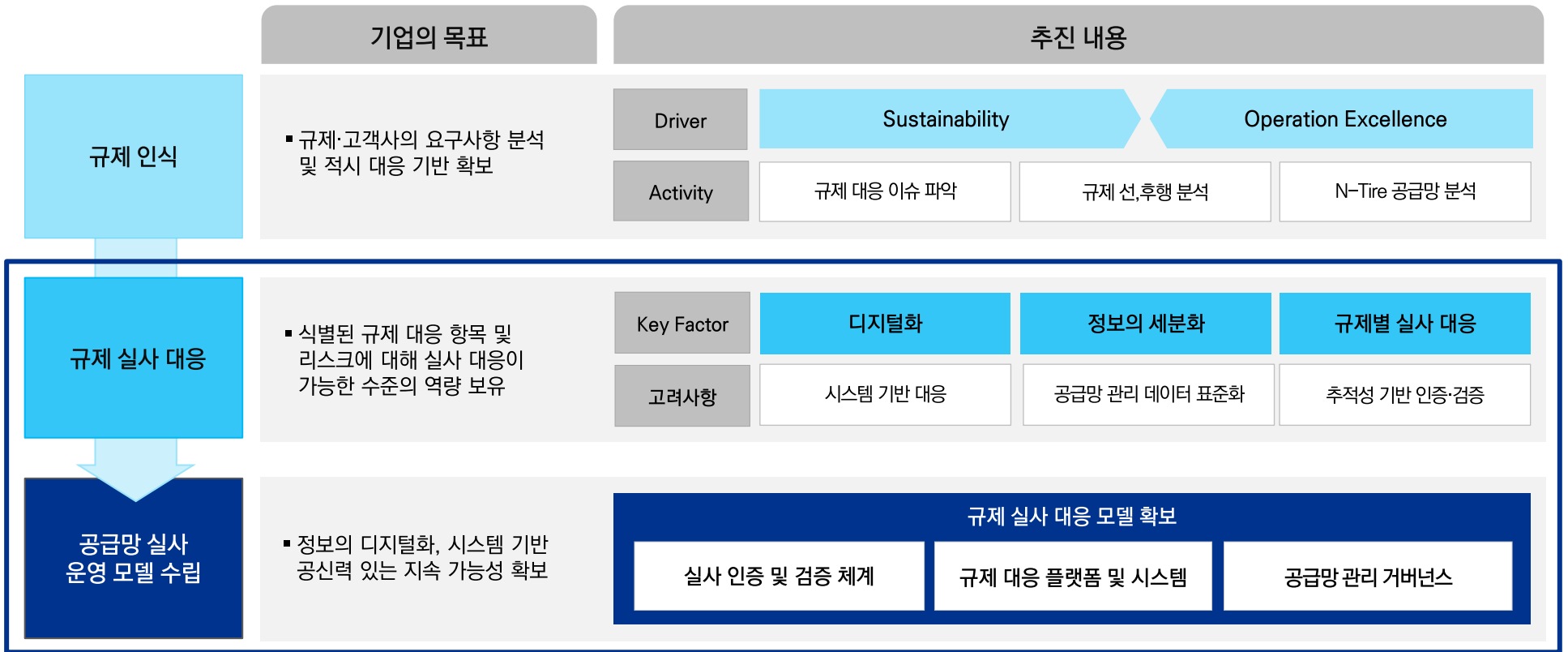
기업은 우선 각 규제별 대응이 아닌 다양한 규제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해 데이터 및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규제별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기반 통합 관리체계 준비가 필요함



Source: 삼정KPMG

## ② 규제 실사 대응력 확보

다음으로 복합 규제에 대한 대응 항목 운영기준 수립, 데이터 준비, 시스템 기반 관리를 통해 공급망 규제의 실사 대응, 고객사 요구사항 적시 대응, 인증 및 검증체계 등 규제 실사 대응력 확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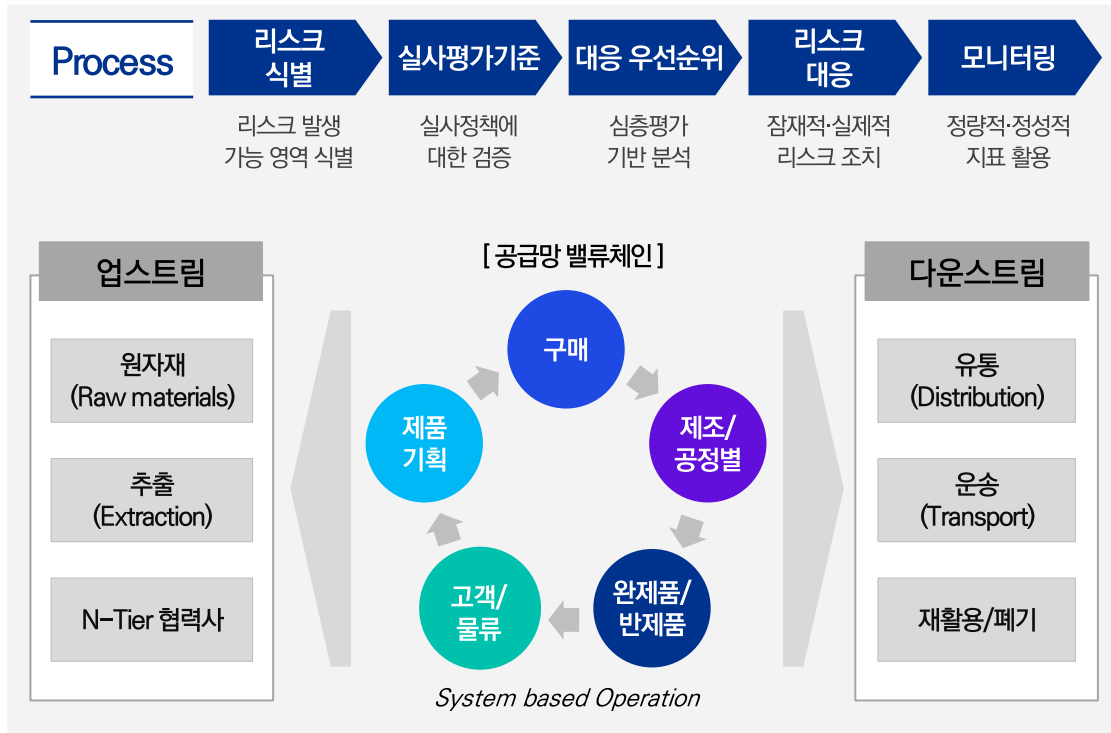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 공급망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기업은 글로벌 규제 대응, 협력사의 요구사항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규제 대응 운영체계 및 시스템, 제3자 인증 및 실사가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함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  규제 실사 대응 가능한 수준  규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기반 대응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To do Activity**

**규제 대응 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산업특성과 규제, 고객사 요구사항을 고려한 대응 전략과 To-Do Activity 수립 지원

**공급망 규제 실사 인증·검증 운영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전략적 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실사 관리 체계 수립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공급망 리스크를 식별, 평가하고 완화·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공급망 규제 대응 시스템 구축**  
EU·미국 통합 규제 대응 및 공급망 실사 준비를 위한 공급망 데이터·리스크 관리 모델 정립

Source: 삼정KPMG

# Contents

I.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영향	02
II. 미국과 EU의 경제안보 정책과 기업 사례 분석	08
III.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전략	24
<b>IV. 결론 및 시사점</b>	<b>29</b>

# Key takeaways

## 01

###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노동 및 인권 등과 관련한 다수의 공급망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장 중에 따라 기업은 공급망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이변 등은 세계 곳곳에서 원부자재 수급 불안 및 물류 대란을 야기해 공급망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각국 정부의 자원 및 기술 확보 경쟁을 심화 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 ✓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대두되면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산업 역량 강화와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통상 연계 제재, 공급망 실사·기업정보 및 제품 정보 공개 등 다수의 규제를 도입해 기업에게 이행 준수를 요구하고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유도, 이에 더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급망 규제 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관련 동향 예의주시 필요
- ✓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및 탄소 감축, 인권, 강제노동, 산림 벌채 등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유통·판매 및 수출금지, 벌금 등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강력한 법적 요구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

## 02

### 기업의 대응 전략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강력한 공급망 규제 폭풍 속, 기업은 통합적 대응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와 동시에 시스템 기반의 공급망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 기업이 ESG 정보공시, 제품 탄소 및 통상 제재, 환경·인권 등의 복합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통합 대응 플랫폼과 공급망 실사를 위한 인증 및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 모색 필요
- ✓ 우선 단위 규제별 대응이 아닌 다양한 규제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해 실사 및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규제별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기반 통합 관리체계 준비 필요
- ✓ 다음으로 복합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및 운영 기준, 데이터 준비, 시스템 기반 관리를 통해 공급망 규제의 실사 대응, 협력사 요구사항 적시 대응, 인증 및 검증체계 등 규제 실사 대응력 확보 필요
- ✓ 공급망 대응 전략 수립 시, 글로벌 규제 대응, 협력사의 요구사항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규제 대응 운영체계 및 시스템, 제3자 인증 및 실사가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



# Business Contacts

## Supply Chain Services

봉찬식  
전무

T 02-2112-7732

E chansikbong@kr.kpmg.com

박문구  
전무

T 02-2112-0573

E mungupark@kr.kpmg.com

박원  
전무

T 02-2112-0823

E wpark@kr.kpmg.com

남윤철  
상무

T 02-2112-0156

E enahm@kr.kpmg.com

## ESG Business Group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박경수  
상무

T 02-2112-6710

E kyungsoopark@kr.kpmg.com

허인재  
상무

T 02-2112-3399

E ihur@kr.kpmg.com

이승근  
상무

T 02-2112-0992

E seungkeunlee@kr.kpmg.com

[home.kpmg.kr](http://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